

“새 정부의 급격한 정책변화에 대처하는 ‘리스크 대응 TF’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”

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

“새 정부 정책에 기업 고객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.”

양영태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(사진)는 21일 서울 미근동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“지평은 지난달 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준법 경영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‘준법경영 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(TF)’를 꾸렸다”며 이같이 강조했다.

이 TF는 지평의 노동팀, 공정거래팀, 조세팀, 형사팀, 언론대응팀, 입법지원팀, 금융규제팀 등으로 구성돼 새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. 노동, 공정거래, 조세, 인권, 반부



패, 소비자 문제, 자본시장 범죄, 기업 범죄, 언론·감사원·국회 대응 등 정부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. 사전 진단과 예방부터 분쟁 해결, 사후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.

양 대표는 “문재인 정부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노동, 공정거래 분야 등 기업 환경을 크게 바꿀 정책을 추진할 전망”이라며 “지평은 정부 인사, 시민단체 등과의 폭넓은 관계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에 준법경영을 컨설팅하고 관련 위험 요인

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지평은 그동안 큰 성과를 올린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다. 2007년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호찌민에서 시작된 해외 네트워크 구축은 지평의 강점 중 하나다. 현재 8개국 9곳(상하이, 호찌민·하노이, 캄보디아 프놈펜, 라오스 비엔티안, 인도네시아 자카르타, 미얀마 양곤, 러시아 모스크바, 이란 테헤란)에 지사를 두고 있다. 국내 로펌 중 가장 많다. 양 대표는 “5~6개 해외 지사를 추가로 늘릴 예정”이라며 “해외시장에서 기존 합작투자, 인수합병(M&A), 금융거래 자문 분야 외에도 각종 분쟁 해결, 해외 노동자 문 등도 강화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김주완 기자 kjwan@hankyung.com